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3월 25일 (목)

CONTENTS

-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IB 2021-05)

CONTENTS

- I.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 1
- II.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 13
- III.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 22
-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종인, 이윤식

편집간사: 이시우

발 행 일: 2021년 3월 25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3월 4째주)는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이인배·김태원 통일외교안보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1.20)을 통해 트럼프 前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다. 음에도 불구하고, 對中 견제정책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일 2+2(3.16), 한·미 2+2(3.18), 그리고 쿼드(QUAD) 정상회담(3.19)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들간 연합체 구성을 적극화함.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중 견제 정책에 우리는 쿼드 체제의 방향성과 역할, 협력의 방식 등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투영시켜낼 필요가 있음

제2편: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한상필 비서관)

2019년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497조원으로 자산대비 167.1%에 이룸.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이후 개선추세였으나 문 정부 들어 다시 악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을 수정·폐기하고,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변경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임. 더구나 한국판뉴딜사업은 추가적인 재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재수립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적정투자 유도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등을 공공기관 재무상황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제3편: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나경태 연구위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문제는 국내 OTT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OTT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점임.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망사용료 및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대중 경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작성: 이인배·김태원 통일외교안보실(lee.in.bae@ydi.or.kr)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1.20)을 통해 트럼프 前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對中 경제정책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특히, 미·일 2+2(3.16), 한·미 2+2(3.18), 그리고 쿼드(QUAD) 정상회담(3.19)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들간 연합체 구성을 적극화함. 이러한 바이든 신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중 경제정책에 우리는 쿼드 체제의 방향성과 역할, 협력의 방식 등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투영시켜낼 필요가 있을 것임

1. 바이든 신정부의 對中 경제 가시화

□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3.16, 도쿄) : 對중국 견제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확인

○ 미·일은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2+2회담을 개최,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메시지를 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日 외무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 미·일 및 한·미·일 3개국 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도 확인했음”

-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압력 수단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임”

-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춧돌(cornerstone)로 계속될 것임”
- 미·일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함
 - 특히, 동·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군사·경제 등 각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
 - 아울러 미·일은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
-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3.18, 서울) : 한미 이견 속에, 미국의 중국 견제 필요성 강조
 - 블링컨 국무장관은 訪韓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어젠다를 분명히 밝히는 방식을 선택, 블링컨 장관이 계속 중국을 언급하자 “회담의 무대는 한국이지만 청중은 중국”이란 말이 나옴
 - 反중국 연대체인 쿼드(Quad)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답한 반면,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동조국들의 모임이며,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간 쿼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힘
- 미·중 알래스카 회의(3.19, 알래스카) : 노골적 적대감을 표현한 상견례
 - 미국과 중국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틀간 세 차례 2+2회담을 진행
 -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낮은 수준의 합의에

도 이르지 못한 채 종료

- 이로써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
-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동맹과 공유하는 우려를 전하고, 홍콩, 신장, 티벳, 대만, 사이버 공간 등 미중 간 충돌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경고하며, 미중 갈등의 골을 그대로 보여준 회담
- 블링컨 국무장관은 “동맹과 공유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미국의 정책과 원칙, 세계관을 제시하고 싶었고, 이번 회담에서 이 일을 했다”고 회담 후 소감을 밝힘
- 양제츠 정치국원은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양측은 앞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를 향해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기 위해 ‘무갈등’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
- 왕이 외교부장 또한 “중국은 주권이 원칙의 문제이며 이를 방어하려는 중국의 결단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언급

2. 反中 4자 연대(쿼드 QUAD) 체제 구축 진행

□ 쿼드(QUAD) 진행 상황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8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공식적으로 명시, 美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와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A Free and Open Indo-Pacific*)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
 - ※ 2017년 11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을 공식화하고,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2018.5.30.)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확대강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중 연대 노선 강화
 - 쿼드는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 패권주의 견제를 위한 성격
- 쿼드 전략대화는 2017년 11월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으로 시작, 2019년 9월 개최된 회의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후, 3월 12일 첫 정상회담 개최로 제도화 진전 중
 - 2019년 9월 유엔총회(UNGA) 계기로 미국(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 2차 회담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 구성을 한국, 아세안, 뉴질랜드 등에게 제안¹⁾

1) 2020년 10월 대면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12월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12.18,

- 당시 美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 방문을 패싱하고 일본을 들리서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쿼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재조명
- 일본 외무성은 3차 회담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바이든 정권 주도하에 대중국 봉쇄 노선인 인도·태평양 구상과 쿼드가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

〈표 1-1〉 쿼드 전략대화 발자취

- ▶ 2017년 11월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으로 시작
- ▶ 2017. 12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태평양 구상 공식 언급
- ▶ 2018. 5. 30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
- ▶ 제1차 장관급 쿼드 전략대화 : 2019년 9월 미국(뉴욕)
 - UN총회 계기, 장관급 첫 회의
- ▶ 제2차 장관급 쿼드 전략대화 : 2020년 10월 일본(도쿄)
- ▶ 제3차 장관급 쿼드 전략대화 : 2021년 2월 화상회의 - 정례화 합의
- ▶ 제1차 쿼드 정상회담 : 2021년 3월 12일(화상회의)

□ 미국 전략서를 통해서 본 쿼드 구상²⁾

-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 요소인 중국에 대한 인식은 역대 행정부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2015)는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군사력 현대화와 군비 확장으로 발생하는 상호 오해로 인한 위협을 낮추기 위해 그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란 소극적 입장을 표명
 -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2017)에서는 “중국은 자신의 경

Videoconference)를 개최해 북한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전략적 상황 변화를 검토, 2021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2) 바이든 신행정부의 쿼드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룬 공식적인 안보전략문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모두에 밝힌 바처럼, 중국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제군사력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강제적 설득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현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간섭을 차단하며, 역내 중국의 군사적 재량권(a freer hand)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적대적 인식을 표시

- 美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2018) 제II장 ‘인도-태평양의 전략 환경 전망’에서 인도-태평양 내 위협 요소를 강도 순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구분하면서,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
 -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직설적 표현 사용
 - “중국은 미국이 구축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국제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어 번영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중국은 이를 악용하여 미국이 지역 내 구축해 놓은 규칙 기반의 질서(the rules based order)와 가치(values), 원칙(principles)을 망가뜨리고 있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 분야 위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군사력 현대화(Military Modernization)와 강압적 행동(Coercive Actions)’
 - “중국이 단기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y) 추구, 궁극적으로 범지구적 우세(global preeminence)를 추구할 것”
 - “중국은 광범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바탕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분야 위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
 -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강압적인 행위를 지속한다.”
 - “중국은 다른 국가가 중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강제적, 유화적인 경제적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역 상대국의 기술과 정보를 훔친다.”

- 美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2018)전반에 걸쳐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 특히 중국의 위협 중심으로 설명함

〈표 1-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상 중국 관련 서술

구 분		주 요 내 용
서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인해 자국의 주권과 번영, 평화를 위협받고 있음 권위주의적인 수정주의 강대국들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들의 편협한 이익확장을 추구하고 있음
제Ⅳ장	역내 거버넌스 옹호	중국 내부의 인권, 소수민족, 종교, 민주화 문제 등 언급
제Ⅴ장	평화와 안전의 보장	(해양영역 보호) 남중국해 영토분쟁 사례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며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임
제Ⅴ장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이버 영역 위협)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행위자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3. 쿼드 참여국의 입장과 군사적 대응능력

- 쿼드 국가들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동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위협이라는 인식 공유 및 지역패권으로의 부상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나,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한 입장

□ 일본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
- 일본은 미국의 패권 지원을 통해 역내 영향력 증대, 공세적인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강조

- 일본³⁾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며 상호운용성이 탁월한 전력 제공 파트너, 즉 역내 ‘핵심 조력자(key enabler)’임
 - 일본은 對中 견제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전방 기지를 미국에 제공
 - 전방 기지에 약 5만 4,000명 미군 주둔, 해군 7함대, 해병 3원정군, 3개의 공군 비행단 등 해양통제(sea control) 및 세력투사(power projection) 능력 구비
 - ※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함은 미국이 유일하게 항구적으로 전방 배치한 원자력항공모함으로서 역내 해양우세 확보에 중심적 역할 담당
 - FOIP 관련 미일동맹의 가치는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과 직결
 - 해상자위대에는 약 4만 5천 명 현역이 근무, 총 49척의 주요 수상전투함과 20척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 장기원해작전의 주력은 각 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4개의 ‘호위대군(護衛隊群)’임
 - 최신 헬기항공모함 4척 운용, 이즈모급 2척은 장차 F-35B 전투기를 탑재, 운용하기 위한 성능개량이 예정

□ 호주

- 호주는 미국의 관여를 통한 지역 안정 및 중국의 기존 지역질서 편입을 선호하는 입장임
-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 미래가 달린 “기회의 공간”으로 중시
 - 호주는 『2013 국가안보전략서』(*A Strategy of Australia's National Interest*)에서 “인도-태평양” 용어 처음 사용, 『2017 외교백서』에서 중국을 호주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

3) 김재호·민정훈, “트럼프 행정부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적 목표, 방법, 수단”, 『평화학연구』, 제21권 1호 (2020), pp.69~70.

- 호주의 안보 취약성 보완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위협 견제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
- 호주의 해군력은 호주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작전에서 실력을 발휘, 이를 고려해 장거리 대양작전에 적합한 전력을 발전시켜 옴
- 호주는 다른 쿼드 국가들에 비해 해상 항공력이나 지상으로의 세력투사보다 수상전투함 및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에 집중해 온 경향을 보임
- 호주 해군의 주요 수상전투함은 구축함 2척, 호위함 11척, 초계/연안전투함 15척임
 - 2010년대 27,800톤급 캔버라(Canberra)급 헬기상륙함 2척 건조 등 원정 작전 능력도 구비중임
-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역 보호를 위한 해군의 '작전 속도(operation tempo)'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호주 해군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최대화
 - 잠수함 전력: 6척→12척 증강
 - 호바트(Hobart)급 신형 방공구축함: 3척 확보
 - 안작(Anzac)급 호위함 8척→헌터(Hunter)급 차세대 호위함 대체
- 호주는 우방국들과 인도-태평양 인테버(Indo-Pacific Endeavor) 해상 전단 구성 및 미국과 호주 간 「군사태세협정」(Force Posture Agreement) 체결을 통해 역내의 군사적 역량 증진에 있어 양자 및 3자 간 군사 협력의 기회 증대

□ 인도

- 인도는 쿼드에 동참하면서도 미국의 對中 견제와 봉쇄전략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으나, 2020년 중국과 국경에서

유혈 충돌 사태 이후 태도 변화

- 2019년 9월 첫 장관급회의에서 ‘공유하는 가치’, ‘해양 안보’, ‘주권 존중’ 강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4국 공동성명 발표나 회전이 없었던 것은 참여국들이 ‘중국 견제’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
- 인도는 FOIP 비전을 일정 부분 공유, 쿼드 일원으로서 협력 의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요 파트너이지만, 미군과 인도군의 상호운용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기간에 군사 협력과 높은 수준의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전망
 - 인도 해군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군 강국과 역량을 견줄 수 있다며 자긍심 충만
 - 대표적으로 자체 건조한 아리한트(Arihant)급 전략핵잠수함(SSBN), 러시아의 키예프(Kiev)급 항공모함을 개장한 45,000톤급 비크라마디티야(Vikramaditya) 보유
 - 호위함급 이상의 주요 수상전투함은 총 27척 운용, 중소형의 초계 및 연안전투함 100여 척 이상이며 해상항공력도 미국제 최신형 해상초계기 P-8I 넵툰(Neptune) 8기와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29K 45대 등임
 - 인도는 미국과 2018년 「통신 호환성 및 보안 협정」(Communication Comparability and Security Arrangement)을 체결, 상호운용성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연합군사훈련을 확대중임
 - 그러나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예산, 부적절한 정비 및 군수지원 등 역량 발휘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
 - 다양한 국가에서 개발된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향을 지니는데, 현재 인도 해군이 운용하는 총 16척 잠수함 중 10척은 러시아제, 4척은 독일제, 1척은 프랑스제, 나머지 1척은 국산임

□ 쿼드 안보분야 협력 동향

○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말라바르(Malabar)’ 해상 훈련

※ 말라바르(Malabar)는 1992년부터 인도와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번갈아 가며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합동훈련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

-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상 훈련은 2020년 처음 호주 초청, 쿼드 4개국 모두 연합훈련에 참여했는데 10월 외교장관회담 직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동 훈련이 쿼드의 해양 안보협력을 위한 아키텍처로 발전할지 그 향방에 주목

※ 호주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2020 국방 전략 및 구조 계획(2020 Defense Strategic Update and 2020 Force Structure Plan)’ 발표

4.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확대될 가능성

○ 美 국방부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June 1, 2019))는 역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데 일종의 파트너십 국가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대만을 지목

- 2020년 [對중국 전략보고서]는 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을 언급

○ 美 의회는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안보공약 의지를 강조하고,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공세 강화에 대응해 지난해 말 12차례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 시행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의지 과시

※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를 우려해 「대만법」(TAIPEI Act, 2020.3 발효)을 제정해 미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

□ 쿼트 플러스를 활용한 외교안보 전략 추진 필요

- 쿼트 플러스 참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
 - 중국의 반발은 예상되나, 쿼트 플러스 참가는 한중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국익을 관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
- 역내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초기에 개입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음.
 - 아직 태동단계이며, 정확한 전략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제도화 前 단계에서 참가해, 우리의 외교안보 보다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중국의 패권적 압력에 개별적 대응보다 집합적 대응이 안전
 - 역내 안보 질서뿐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의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공격적 행태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집합적으로 대응할 경우 효과와 안전성 차원에서 우월할 수 있음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